

2007. 12. 3 제180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12. 3 제180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뉴욕주의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해외출장 리포트]

미국 뉴저지주 성장관리정책

도시경영·경제

1. 대형 점포와 지역 상점가, “함께 가자” 공생(共生) 피해 (일본 사이타마縣)
2. 창조·문화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1등 공신’ (영국 뉴캐슬市)
3. ‘환경·발전·지속가능한 도시조정부’ 신설 (프랑스)

복지·문화

4. 다른 종교와 민족의 기념일을 달력 하나에 모아 (베를린)
5.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브라질 쿠리치바市)
6. ‘아동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10년까지 4조 원 투자 (영국)
7. 더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노숙자 (로스앤젤레스)
8. 공공장소에서 심장마비? 자동 심폐소생기로 응급처치 가능 (파리)

목 차

9. 제2의 부모, 수양부모 모집 (도쿄)
10. 자녀양육, 급할 때는 도우미에게 SOS! (일본 사이타마縣)
11. 노인이 살기 편하게...지역케어 체제 정비 (도쿄)
12. 12월 31일(질베스터)엔 달리기로 추억을 만드세요 (베를린)

도시환경

13. 도시를 푸르게, 푸르게 (도쿄)
14.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운전자’에게 통행료 더 거두기로 (캘리포니아州)
15. 태양전지판으로 전기요금도 아끼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캘리포니아州 버클리市)
16. 집 지을 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 (영국)
17. 재택근무와 재택사업 적극 지원...2016년까지 CO₂ 배출량 20% 줄이기로 (영국 남동부)
18. 이제는 ‘에코 드라이브’ 시대 (도쿄)

도시교통

19. 도로 안전 캠페인이 큰 효과 거둬 (파리)

도시계획·건설·주택

20. 2030년 파리 수도권의 미래상은? (파리)

방재·안전

21. 건물 디자인만 잘하면 범죄도 줄일 수 있어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벤치마킹 사례]

뉴욕주의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뉴욕주는 州 내 지방정부에 대해 기존의 일반재원 이전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재정성과를 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2006 회계연도부터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AIM Program: Aid and Incentives for Municipalities Program)을 유인책으로 마련함.
 -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이전하고, 주정부는 이를 산하 지방정부에 배분함.
 - 뉴욕주의 AIM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산세 증가 최소화와 재정성과 제고, 지방정부 간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촉진 등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프로그램 시행 시 주정부의 재정상황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함.
 - 예를 들어, 2006~2007 회계연도에는 기존 AIM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뉴욕시를 제외한 4대 도시(버펄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용커스)에 정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른 시와 타운 및 빌리지에는 AIM 프로그램의 일정비율을 무조건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 ‘공동 지방서비스 인센티브’(Shared Municipal Services Incentive) 포상금 규모를 확대해 최고 20만 달러(약 1억 8700만 원)까지 지원함. 또한 ‘공동 고속도로서비스 인센티브 포상’(Shared Highway Services Incentives Awards), ‘지역 의료보험 인센티브 포상’(Local Health Insurance Incentive Awards) 등을 추가로 마련함.

- 재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함. 즉, 10만 달러(약 93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는 AIM 프로그램을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
 - 재산세 부담 최소화나 경감
 - 경제활성화와 재산세 세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개발이나 인프라에 투자
 - 운영비용을 영구적으로 최소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전략 수립 지원

- 지원 대상 지방정부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성과 계획을 주정부 예산책임자와 州 회계국에 제출해야 함. 재정성과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함.
 - ‘2006~2007 회계연도 AIM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다년도 재정계획
 - 장기적 재정안정화 달성에 필요한 핵심 재정성과 목표와 실행계획을 포함 하는 새로운 재정혁신 계획
 - 향후 어떻게 효율성 및 혁신을 이룰 것인지와 AIM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하는 재정책임 보고서 작성

- 州 회계국은 지방정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건 이행에 응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AIM 프로그램을 중단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표 1> 뉴욕州的 AIM 프로그램(2005~2006 회계연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기본 보조금(Base Grant)	모든 지방정부에 전(前) 회계연도 수준의 보조금 지원	무조건부 지원
추가 지원(Additional Aid)	중기 재정계획과 기타 재정책임성에 대한 주정부의 요구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추가 재정지원	조건부 지원(재정 책임성 준수 의무)
공동 지방서비스 인센티브 (Shared Municipal Services Incentive)	지방정부의 비용절감 유도 및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노력 지원	성과 보상적 성격

자료: Division of the Budget, New York State(2007).

<해설 및 평가>

- 뉴욕주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재정형평화 기능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AIM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재산세 부담 경감, 경제활성화와 재산세 세원 확충,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원 대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정부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재정지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공동 지방서비스 인센티브(SMSI: Shared Municipal Services Incentive)를 확대해 지방정부 간 합병이나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노력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비현실적이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출예산 항목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간의 괴리로 인해 자치구 재정수요 예측이 부정확함.
 - 둘째, 수혜단체인 자치구의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에서는 보통교부

세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과 세입 증대 등을 위해 자체 노력을 하도록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자체노력 반영 규정이 미비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대폭 정리하고 측정단위 조정과 단위비용 현실화를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고,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을 권장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 세입 증대 등을 위해 자체노력을 기울이도록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인센티브를 적용함. 재정성과 제고 및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촉진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자치구는 그만큼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해 주고 세입 증대에 노력한 자치구는 그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액해 주는 등 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유인을 제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을 권장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배준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jsbae@sdi.re.kr)

[해외출장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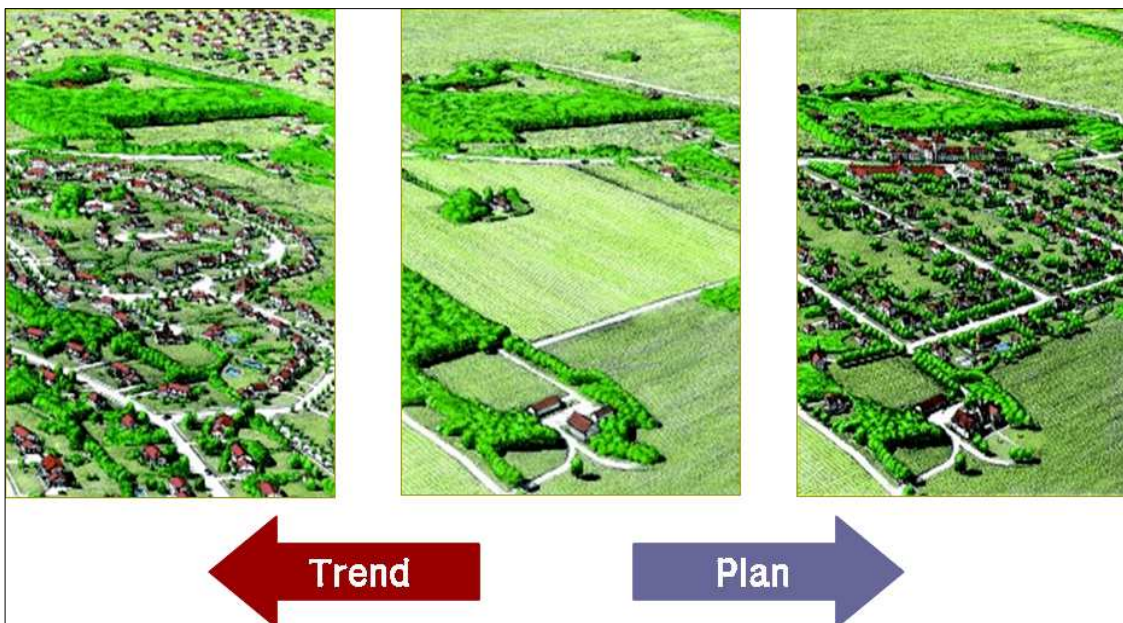
미국 뉴저지주 성장관리정책

<개요>

- 미국 광역정부 및 광역협의체의 성장관리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 9월 3일 뉴저지주의 성장관리 사무국을 방문함. 이곳에서 뉴저지주의 광역계획 수립과정과 성장관리기법을 조사함.

<주요내용>

- 뉴저지주는 주 단위의 개발 및 재개발 계획(New Jersey Stat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lan) 수립을 의무화한 뉴저지주 계획법(New Jersey Planning Act)을 1985년에 시행함으로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됨.



한 지역(가운데 그림)을 계획 없이 개발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난개발이 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효율적인 고밀 개발과 녹지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 뉴저지주 계획은 ‘상호 수용 협의’(Cross-Acceptance Process)라는 독특한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3가지 수준의 정부(주정부, 21개 카운티, 56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획절차를 거침.
 - 이 계획절차는 비교단계(Comparison Phase), 협상단계(Negotiation Phase),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최종 검토단계(Final Review Phase), 계획 채택(Adoption of the Plan)으로 구성됨.

- 철저한 계획 영향평가를 통해 광역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현 개발추세에 따른 토지이용의 미래상과, 계획을 통해 관리한 토지이용의 미래상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계획 효과를 보여줌.
 - 2000년 뉴저지주 계획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로 건설 및 정비비용으로 8억 7000만 달러(약 7880억 원), 상하수도 건설 및 정비 비용으로 14억 5000만 달러(약 1조 3131억 원)가 절약되는 등 2020년까지 매년 1억 6000만 달러(약 1449억 원)가 절약되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2000년 당시 개발 예상면적의 1/3만이 개발됨에 따라 녹지 494km²가 보존 될 것으로 예측됨.
 - 2000년 기반시설 필요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1144억 달러 (약 103조 6000억 원)가 투자되어야 함.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계획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철저한 계획 영향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과학적인 계획 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의 제시가 가능함.
 - 새로운 미래상을 현 개발추세에 따른 미래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획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음.

/김은란 도시계획부 초빙부연구위원(kimen@sdi.re.kr)

1. 대형 점포와 지역 상점가, “함께 가자” 공생(共生) 피해 (일본 사이타마縣)

○ 일본 사이타마縣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등장으로 지역 상점가가 침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점포의 지역상업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대형 점포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상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역상업 발전을 위한 행정관청과 대형 점포, 상점가의 역할 분담이 명시돼 있음.

·방법·방재 등 대형 점포의 전반적인 사회공헌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 있음.

- 상점가는 상업뿐 아니라 방법, 방재, 문화,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가용 문화 확산과 대형 상업시설 진출로 쇠퇴하고 있음.

·사이타마縣이 2006년 585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점가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63.4%가 지역 상점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0% 이상이 대형 점포의 등장을 그 원인으로 꼽음.

- 대형 점포는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경제나 마을 만들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이타마縣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 것임.

·사이타마縣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市·町·村의 지역 상점가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이 함께 경제발전과 마을 만들기에 힘을 모으도록 할 방침임.

-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대형 점포는 상공단체에 가입해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가하고 협력해야 함.

·상점가와 상공단체는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형 점포에도 활동상황을 충실히 알려야 함.

·市·町·村은 관계자의 협의공간 마련 등 매개역할을 하고, 縣은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하도록 규정함.

(www.tokyo-np.co.jp/article/saitama/20071104/CK200711040206175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대형 점포의 확산으로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의 상권은 축소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대형 점포의 입점을 막을 논리적 근거는 미흡함.
- 일본 역시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대형 점포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공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형 점포가 지역주민 및 중소 유통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sch@sdi.re.kr)

2. 창조·문화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1등 공신’ (영국 뉴캐슬市)

- 영국 뉴캐슬市의 ‘문화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이 청년의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줬다고 ‘뉴캐슬·게이츠헤드 추진회’(Newcastle and Gateshead Initiative)가 최근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뉴캐슬市와 게이츠헤드市를 중심으로 한 북동부 지역에는 창조와 문화 산업분야에 약 2만 명이 새로 고용됐는데, 이는 이 지역 석탄산업에 고용된 인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철강과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북동부가 이제는 문화·과학·창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게이츠헤드市의 변화는 ‘북쪽의 천사’(The Angel of The North)라는 조각상으로 상징화됨. 이는 지역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64100/Culture-bigger-coal-claims-Northern-boss)

3. ‘환경·발전·지속가능한 도시조정부’ 신설 (프랑스)

- 프랑스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환경·발전·지속가능한 도시조정부’(MEDAD: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를 새로 발족함.
 -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주택정책 시행 시 권고사항이던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정부의 부처명으로 함.
 - 도시개발에 있어 자연친화나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지방분권의 의미로 지역관리자의 직접 운영이라는 측면을 부각해 도시관리 체계를 최소단위로 설정하고, 최소단위에 부합하는 인물이 직접 참여해 이전 사업보다 훨씬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임.
 - MEDAD는 대중교통과,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과, 에너지자원정책과, 환경 및 자연관리과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라 기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분과와 역할을 분담하게 됨.
 - 예를 들어,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과는 도시계획과 주거·건설분과, 에너지자원정책과는 산업부, 환경 및 자연관리과는 환경부와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됨.
- (Antoine Loubière Urbanisme, 2007년 7·8월호)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市, 교통범칙금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 실시
- 쿠리치바市, 주요 횡단보도에 레드카펫을 깔고 ‘삶의 길은 거리에서 시작’이라는 보행자 보호 캠페인 실시

4. 다른 종교와 민족의 기념일을 달력 하나에 모아 (베를린)

○ 베를린시는 많은 종교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최근 '2008년 상호 문화주의 달력'(Interkultureller Kalender)을 제작함.

- 달력을 통해 문화와 종교마다 다른 휴일과 축제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달력은 50센트(약 6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음.

- 종교마다 다른 신년 행사, 크리스마스 축제, 이슬람의 라마단, 터키의 어린 이날, 크리스토퍼 거리의 날(Christopher Street Day: 베를린 동성애자 거리 축제), 할로윈 데이 등 해당 집단에는 중요한 날짜를 달력에 표기함.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및 문화가 공존하는 베를린시에서 각기 다른 휴일과 축제 때문에 종종 갈등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1/07/88465/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시가 제작한 '상호 문화주의 달력'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이는 베를린시가 상호 문화주의 정책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시티로 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판단됨.

- 현재 서울시가 설립 중인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도, 베를린시의 상호 문화주의 달력과 같이 외국인에게 감동을 주고 서울시민이 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 홈페이지도 영어 중심에서 다국어로 확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언어권 사이트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가별 문화 정보, 기념일, 행사 등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5.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에 소득세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어린이는 미래를 원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2008년에 내야 할 소득세를 2007년 말까지 앞당겨 내면 됨.
 - 이 캠페인을 통해 낸 소득세 일부는 市 아동·청소년 권리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투자됨.
 - 납세자는 어차피 내야 할 소득세에서 일부를 기부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없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139)

6. ‘아동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10년까지 4조 원 투자 (영국)

- 영국정부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와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빈곤 아동 퇴치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할 ‘아동 빈곤 부서’(The Child Poverty Unit)를 공동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빈곤 아동이 증가함.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빈곤 아동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약 9만 명의 빈곤 아동을 줄여야 함.
 - 영국정부는 2010년까지 4조 원을 들여 ‘아동 빈곤의 순환’(Cycle of Deprivation)을 막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아동 빈곤 부서의 주요 업무는, 편부모의 실업이 아동을 빈곤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므로 실업자인 편부모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64170/Minister-unveils-Child-Poverty-Unit)

7. 더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노숙자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노숙자 125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 로스앤젤레스市는 2006년에 50명의 경찰관과 마약중독자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9000명에 이르는 노숙자를 체포했음. 석방 후 노숙자가 다시 거리로 나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음.
 - 노숙자 요양원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미국 내 20여 개 도시가 몇 년에 걸쳐 펼친 노숙자 복지정책의 산물로, 이를 통해 노숙자나 마약중독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노숙자를 체포해 석방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노숙자나 마약중독자를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이후에는 임시 피난처가 아닌 노숙자만을 위한 요양소나 주택을 제공함.
 -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도 제공함.
 - 이러한 정책 수행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경찰관의 근무시간과 임금, 앰블런스·응급실·교도소 이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www.latimes.com/news/printedition/asection/la-oe-mangano29oct29,1,3858934.story)

8. 공공장소에서 심장마비? 자동 심폐소생기로 응급처치 가능 (파리)

- 파리市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8000만 원)를 들여 공공장소에 자동 심폐소생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에서는 1년에 약 6만 명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데, 이 중 70%가 가정에서, 30%가 공공장소에서 심장박동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이 중 약 5%만이 응급조치로 구조되고 있음.

- 심장마비 발생 후 약 5분 안에 조치를 취하면 소생 가능성이 30%나 높아지기 때문에, 파리市가 대처방안으로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를 제안했음.
 - 파리市의 79개 스포츠센터, 20개 구청, 시립박물관 7곳, 시립도서관 13곳에 2008년 1월 말까지 자동 심폐소생기가 설치될 예정임.
- (www.paris.fr/portail/Solidarites/Portal.lut?page_id=98&document_type_id=4&document_id=34137&portlet_id=10014)

9. 제2의 부모, 수양부모 모집 (도쿄)

- 도쿄都는 2007년 11월 ‘아동학대 방지의 달’을 맞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수양부모를 모집하고 있음.
 - 도쿄都에는 부모의 투병이나 이혼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이 약 3900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런 아동을 위해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수양부모임.
 - 都의 수양부모 제도는 ‘훗도 패밀리’(양육 가정)와 ‘양자(養子) 결연 수양부모 제도’ 등 2종류로 운영됨.
 - 훗도 패밀리는 입양하지 않고 일정기간 가정에서 양육해 주는 제도임.
 - 훗도 패밀리에 참여하려면 입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된 양육자가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부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아이 양육 경험이 있어야 하고 20세 이상의 자녀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집에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함.
 -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프렌드 홈’ 희망자도 모집하고 있음.
 - 방학 등을 이용해 며칠간 같이 생활할 수 있음.
- (www.koho.metro.tokyo.jp/koho/2007/11/hotfamil.htm)

10. 자녀양육, 급할 때는 도우미에게 SOS! (일본 사이타마縣)

- 일본 사이타마縣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부모 도우미 단체’를 지역마다 만들기로 함.
 - ‘자녀양육 마스터’ 세미나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수강한 수료자를 지역의 자녀양육센터에서 활동하도록 함.
 - 세미나는 2일 코스로, 보육사가 자녀양육 방법과 응급처치 등을 강의하고 현장견학도 실시함.
 -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타마縣의 핵가족 세대는 전 세대 중에서 64.4%를 차지해 일본 전체에서는 나라縣 다음으로 높은 비율임.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를 둔 가정이 조부모나 이웃의 도움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마다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용자가 많은 데 비해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 도우미 활용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임.

(www.tokyo-np.co.jp/article/saitama/20071105/CK2007110502061950.html)

11. 노인이 살기 편하게...지역케어 체제 정비 (도쿄)

- 2007년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립한 ‘지역케어 체제 정비에 관한 기본지침’에 근거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지역케어 체제 정비구상을 만들고 있음. 도쿄都는 고령자가 생활하는 지역의 보건복지 계획을 구체화해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도쿄都 지역케어 체제 정비구상’을 공표할 예정임.
 - 도쿄都의 지역케어 체제는 초고령 사회를 전제로 함. 2030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됨.

·지역케어 체제의 미래상은 지역케어 체제가 마련된 10년 후 고령자 스스로 생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임.

- 도쿄都의 요양병상 수는 현재 부족한 상태며, 일본 정부가 제시한 의료비 적정화 계획은 도쿄都의 지역 특성과 맞지 않음.

·치료가 시급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망'을 통해 요양병상 수를 확보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7/10/22haq100.htm)

12. 12월 31일(질베스터)엔 달리기로 추억을 만드세요 (베를린)

○ 독일에서는 12월 31일을 '질베스터'(Silvester)라고 함. 2007년 12월 31일 베를린市 샤를로텐부르크區 스포츠클럽 협회가 주최하는 '제32회 베를린 질베스터 달리기 대회'(도넛 달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임.

- 참가자는 흥미 있는 테마로 다양하게 마련된 달리기 구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음.

·9.9km에 이르는 '악마와 용이 날아다니는 산' 등반코스는 참가자의 도전 정신을 극대화함. 수월하게 참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6.3km 코스를,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2km나 4km의 평평한 코스도 마련돼 있음.

·1978년부터 1987년 사이 출생자가 주요 참가자며, 1977년까지의 출생자는 연장자 그룹에서 뛰게 됨.

- 달리기 대회 출발신호는 권총 대신 질베스터 축포를 사용함. 참가자 모두에게 도넛을 주는데, 도넛 내용물은 자두 잼에 겨자 양념 등 다양함.

(www.scc-events.com/events/silvesterlauf/2007/informationen.php)

도 시 환 경

13. 도시를 푸르게, 푸르게 (도쿄)

- 도쿄都是 초록이 넘치는 도시 재생을 목표로 도민과 기업 모두 초록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초록 무브먼트’ 사업을 실시함.
- 초록은 사람에게 평온함을 줄 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나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됨. ‘초록의 무브먼트’는 크게 4가지 사업이 있음.
- 都 항만국이 도쿄만의 매립지 약 88만㎡를 초록 숲으로 만드는 ‘바다 숲 만들기’ 사업을 계획함.
- 都 환경국 도시지구환경부가 도시 녹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잔디를 즐길 수 있도록 ‘교정의 잔디화’를 추진함.
- 都 건설국 공원녹지부가 기존 도로에 가로수를 더 많이 심고, 신설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가로수를 심어 2025년까지 100만 그루 가로수 심기를 목표로 하는 ‘가로수 배증(倍增)’ 사업을 실시함.
- 都 산업노동국 산림과는 ‘꽃가루가 적은 숲 만들기’ 운동을 전개함. 다마 지역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삼나무가 계속 늘고 있는데, 다마 지역의 삼나무 숲 중 1200만㎡를 향후 10년간 꽃가루가 적은 숲으로 만들 계획임.



바다 숲 만들기



교정의 잔디화

(www.koho.metro.tokyo.jp/koho/2007/11/midorimo.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초록 무브먼트’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시민과 기업을 끌어들이며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임.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했던 공원과 녹지 조성비용을 민간과 시민이 협력해 모금 방식으로 일부 전환한 시민참여형 녹화 전략임.
- 서울시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를 통해 시민에게 녹화기금 모금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이 돈을 내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애항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운동도 벌이고 있음.
 - 앞으로 이를 활성화해 도시 내 자투리땅 녹화 및 보행녹도 조성에 시민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민관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임.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4.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운전자’에게 통행료 더 거두기로 (캘리포니아州)

- 미국 캘리포니아州 교통국은 출퇴근 시간에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교통혼잡 비용을 더 부과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 광역교통위원회(MTC: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행정관은,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 대기오염 심화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 교통혼잡 심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함.
 - 이 계획의 목표는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인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임.
 -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에게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 비용을 부과하는 것임.
 - 피크 시간에 주차할 경우 5배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함.
 - 도심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혼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로 1.6km

이동할 때마다 약 180원의 탄소세를 지불해야 함.

(www.insidebayarea.com/search/ci_7290010?source=email)

15. 태양전지판으로 전기요금도 아끼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캘리포니아주 버클리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市는 예산 문제로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수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전지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됨.

- 이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20년 후 각 가정이 전기요금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市 관계자가 밝힘.

- 버클리 시장은, 이 계획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에 많은 市나 州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7/10/26/MNAIT0DQO.DTL)

16. 집 지을 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 (영국)

○ 영국의 주요 주택건설 회사가 기후변화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차세대 프로젝트’(Next Generation Project) 기관이 최근 지적함.

- 조사에 따르면, 주요 주택건설 회사의 25%만이 주택건설 과정의 ‘Carbon Footprint’(탄소 발자국)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

·주택건설 회사의 65%만이 회사 차원의 ‘지속가능성 전략’(Sustainable Strategy)과 ‘쓰레기 처리 전략’(Waste Management Strategy)을 작성했음.

- 차세대 프로젝트 관계자는 주택건설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무관심을 막기 위해 대체에너지, 물 절약, 쓰레기 저감, 생태적인 재료 사용에 대한 시범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64104/)

17. 재택근무와 재택사업 적극 지원...2016년까지 CO₂ 배출량 20% 줄이기로 (영국 남동부)

○ 영국 남동부개발청(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은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남동부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6년까지 20% 저감하고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10% 높이는 계획을 '남동부 플랜'(South East Regional Plan)을 통해 발표함.

-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함.

·단계별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은 제시돼 있음. 재택근무와 재택사업을 지원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계획이 포함돼 있음.

- 남동부개발청 관계자는 2016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힘. 이러한 시도가 환경 관련 기술과 재생에너지, 해양 풍력발전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덧붙임.

- 남동부개발청은 진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연중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64134/South-East-vow-20-carbon-cut)

18. 이제는 '에코 드라이브' 시대 (도쿄)

○ 일본 도쿄都와 사이타마縣, 요코하마市 등 8개 도·현·시(都·縣·市)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광역적인 대책을 추진 중임.

- ‘에코 드라이브’(Eco Drive)는 친환경연료 사용과 연비 향상, 공회전 억제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저감뿐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기여하는 자동차 운전방법임.
 - 2만 장의 포스터를 공공시설에 붙이고 14만 장의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를 운전자에게 배포하기로 함.
 - 통근시간대에 라디오에서 에코 드라이브 광고도 함.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10/20hao100.htm)

도 시 교 통

19. 도로 안전 캠페인이 큰 효과 거둬 (파리)

- 파리는 2007년 10월 30일~11월 13일 새로운 도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음.
- 이 캠페인에 대해 파리 시민의 80%가 캠페인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89%는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동조함.
- 이에 따라 파리 경시청과 파리는 각각 도로 안전 프로젝트 담당자를 임명해 새롭게 개선한 캠페인을 선보였음.
- 시장은 도로안전 기술자를 지정해 각 구청에 관련 지시사항을 내림.
- 이는 경시청이 단순히 교통사고 피해조서를 작성하는 일을 넘어 시와 함께 도로 안전방안을 연구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다양한 크기의 광고 전광판과 우편엽서, 뉴스레터 등을 제작함.
- 보행자, 벨리브(Velib)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오토바이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각 구청에 비치할 예정임.
- 벨리브 서비스 자전거 바구니에 시야를 가리는 대형트럭의 위험을 경고하

는 그림을 붙임.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3)

도시계획·건설·주택

20. 2030년 파리 수도권의 미래상은? (파리)

○ 주택건설, 공공교통 인프라 구축, 경제발전, 자연환경 보호 등 파리 수도권 지역의 2030년 미래도시 계획을 위해 ‘일드프랑스의 수도권 광역계획부’(SDRIF: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Ile de France)가 도시계획 자료나 의견을 수집하고 있음.

- 1950년 이후 신도시 사업 추진, 라 데팡스 지역 조성, RER 파리 교외선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일드프랑스 지역의 주요 도시계획이 정부 주도로 실현돼 왔음.
·1994년 정부와 협력관계 차원에서 시의회의 지역경제·사회분과위원회 파트너로 SDRIF가 설립됐으며, 2004년에는 SDRIF가 시행 중인 도시계획이 전면 재수정됐음.

- 2007년 2월 15일 지역의회에서 법령화된 새로운 미래도시 계획은 지역 도시개발의 방향·실행방법·평가·문제점 등을 담은 보고서와 국토 및 도시 개발 관련 지도, 환경평가보고서 등 세 가지로 구성됨.

- SDRIF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묻는 앙케트를 2007년 10월 15일~12월 8일 파리市 20개 區의 167개 장소에서 실시 중임.

(www.paris.fr/portail/Urbanisme/Portal.lut?page_id=101)

(www.iledefrance.fr/sdrif-enquetepublique)

한줄 뉴스

- 영국, 공공장소 흡연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조사 결과, 시민의 79%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
- 파리市,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에펠탑 등 12개 역사건축물의 불을 끄는 ‘지구를 위한 5분 휴식’ 운동 전개
- 로스앤젤레스市, 2008년 10월부터 항구 내에서 구형 모델 화물트럭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

방재 · 안전

21. 건물 디자인만 잘하면 범죄도 줄일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는, 한 주유소가 리모델링하면서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는 디자인 요소를 적극 도입한 후 이 지역 범죄 신고율이 감소했다고 밝힘.

- ‘환경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 방지’(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은 1960년 초반 한 사회학자가 ‘환경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됐음.

- 이 개념은 주로 학교나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적용됨. 보행로 폭을 넓히고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주변에 나무를 없애거나 높이를 제한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임.

·실제로 한 쇼핑몰에서 보행로와 주차장 쪽으로 모든 창문을 냈음.

·리모델링한 주유소의 경우 보행로 주변의 나무 높이를 1.8m로 제한했음.

(www.sacbee.com/101/story/436704.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 여러 도시가 공공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 긴급호출 장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런던시의 경우, 도시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범죄율을 줄이고 있고, 파리시도 시 외곽지역에 감시카메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대응방식은 지역주민 전체를 범죄자로 보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되는 방법 가로등을 도로, 공원, 광장 등 도시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市가 도입한 방식은 1960~1970년대 뉴먼의 ‘건축 도시 공간에서의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을 실제 디자인에 적용한 것임.
 - 방어 공간이란, 공간이 폐쇄돼 있거나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되면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 모서리 공간을 없애고 개방된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차폐 시설을 줄이거나 창, 개구부(開口部)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한 공간임.
- 건축물의 개방적·투시적 외관 디자인은 가로 및 건축물 주변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가로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 건축물의 저층부 입면(立面)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성창 도시계획부 부연구위원(ysc95090@sdi.re.kr)